

하남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1893
----------	------

발의년월일 : 2019. 8. .

발 의 자 : 김은영 · 정병용 의원 (인)

1. 제안이유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는 한편, 다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양육을 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자녀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 나.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 개발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라. 다자녀가정에 대한 우대 및 지원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4. 관계법령 발췌서

- 「건강가정기본법」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5. 예산수반 사항 : 해당 없음

6.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없음

7. 입법예고 결과

- 가. 입법예고기간 : 2019년 8월 5일 ~ 8월 15일(10일간)
- 나. 의견내용 : 의견없음

하남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건강한 양육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다자녀 가정”이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으로 막내가 만 15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
3. “다자녀 가정 우대카드”란 경기도에서 발급하는 경기아이플러스(I-plus)카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자녀 가정 지원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다자녀 가정의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비용의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우대 및 지원) ① 시장은 다자녀 가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우대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하남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
3.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3. 「하남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7조, 제18조에 따른 시설 사용료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3. 하남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공연 관람요금 감면
4. 시가 운영하거나 위탁한 복지시설 등의 사용료·수강료 등의 감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자녀가정을 위한 지원정책에 대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또는 개별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관련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우대 및 지원 중단)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우대 및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조례 제1632호 「하남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을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으로 막내가 만 15세 이하인” 으로 한다.

건강가정기본법

제25조(가족부양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 혹은 노인 등 부양지원을 요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정에 대하여 부양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